「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4호(2020 겨울): 465-483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3 No.4 (2019 Winter)
http://dx.doi.org/10.20484/klog.23.4.19

사회복지서비스 증세 태도의 결정요인:
연령대와 사회이동성,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주 혜 린*
황 정 윤**

국문요약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태도에 연령대와 사회이동성, 그리고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의 '2018 정부의 질과 정부신뢰 통계조사'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여 STATA 13.0을 통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복지 확대의향, 즉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는 연령대,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사회이동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모색과 개방적 계층이동을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해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달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사회복지서비스, 정부신뢰, 사회이동성, 사회복지확대의향, 증세태도, 연령대

Ⅰ. 서론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복지영역의 국정과제를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 설정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상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인 복지국가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 대상의 확대와 관련 정책의 개발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재원 확보의 수단인 '세금'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전 정부들은 '증세 없는 복지'를 기조로 복지 정책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복지 영역의 지출은 계속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증세 역시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지에 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더 나은 복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노인 빈곤율과 빈부격차의 심화 등과 같은 사회위험의 존재는 여전히 복지 영역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복지 영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조세

* 주저자
** 교신저자

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이 복지 확대를 위한 부담을 짊어질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 배경에서 착안하여 국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 태도에 주목한다. 즉, 개인들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대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 의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가 개인의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사회 이동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요인들을 종합하여 도출하고자 하는 실천적 함의는 무엇인가?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정의와 사회복지 서비스 증세 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에 따른 연구가설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분석에 활용한 자료와 분석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변수의 측정에 대해 논의하며, 제5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이론적 배경에 따라 제시된 가설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함의 및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다.

Ⅱ. 사회복지 서비스 증세에 대한 태도

1. 사회복지 서비스와 선행연구 검토

사회복지 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상에서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중 복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제도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1] 즉, 사회복지서비스(social welfare services)는 대인적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로서 교육, 보건, 주택, 소득보장 부문과 함께 광의의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Kahn, 1979).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되는 무형적·유형적 자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정부, 시장, 비영리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Alcock, 1996; 김진욱, 2005; 구인회·손병돈·안상훈, 2010).

사회복지 확대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한 개인 인식에 대해

1)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사회보장기본법」

크게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질과 사회적 기반 등 제도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사회복지 확대에 대한 인식을 복지의식, 복지인식과 같은 추상적인 가치나 측면을 강조하여 복지태도와 함께 혼용하여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복지에 관한 개인의 인식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강정규, 2014). 선행연구에서는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의향에 있어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연령이 높을수록, 개인의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친복지적인 태도가 나타나며(조정하·김성한, 2018)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교육수준에 관련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이념이 진보성향일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주은선·백정미, 2007). 또한, 이승주와 박소영(2019)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증세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바 있는데, 복지지출을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복지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할수록 증세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더하여 청년층은 증세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밝혀냈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 인식에 대한 제도적인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서,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및 사회 신뢰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강정규, 2014; 김민주·지은구, 2015; 김민주, 2017)이나, 정부의 질에 관한 인식이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이지호·황아란, 2016).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개인의 복지인식,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의향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갖는다. 첫째,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기존의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이동성이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특정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성별, 출신 등의 요인과 관계없이 평등한 기회를 통해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가에 대한 인식에 주목하고, 이것이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해 우리 사회가 마련해야하는 기반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가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본다. 이는 앞서 서술한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 기반 형성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령대에 따른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 정책대상별 적정한 복지 영역 설정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지 논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2. 이론적 논의

1) 연령대

한국 복지국가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후발 주자이지만 성장의 속도는 가장 빠른 국가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복지 비용의 증가를 견인하는 사회경제적 또는 인구학적 요인에

관한 상존 가능성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최영준·배주현, 2016). 인구학적 특성인 연령에 따라 복지 태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규명한 기존의 연구도 연령층을 5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연령층을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복지영역 확대에 있어 실제적인 수혜 대상은 전 국민이지만, 개인이 스스로를 수혜대상 또는 비용부담 대상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청년층은 스스로를 복지 서비스의 수혜 대상이 아닌 비용부담대상으로 여기면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에는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노년층은 본인을 현 시점에서 복지 서비스의 최대 수혜를 받는 대상으로 인지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가설 1-1 청년층은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가설 1-2 노년층은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2)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 정부역량과 기관신뢰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 태도는 세금의 증가라는 비용부담을 포함하기에 정부에 대한 개인 인식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닐 가능성이 크다. 즉, 정부에 대한 신뢰나 정부 역량에 대한 인식이 증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반 국민의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가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는 기관신뢰와 정부역량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관신뢰란 정부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체제의 기능에 대한 믿음으로 “시민이 느끼기에 자신의 선호에 대하여 정부가 얼마나 반응 하는가”를 의미한다(Van de Walle and Bouckaert, 2003; Hinnant and Moon, 2004). 기관신뢰는 단순히 정부에 대한 신뢰를 넘어 정부에 대한 신뢰 및 국가의 정치체제 및 사회 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신뢰를 나타낸다. 즉, 기관 신뢰란 일반적인 정부 신뢰와 더불어 공공기관, 정치기관, 수사기관 등 기관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수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Svallfors, 2002). 반면 정부역량은 “정부의 속성 그리고 이러한 속성을 근간으로 정부의 소임을 이루고 있는 정도”로 정의된다(최진욱 외, 2011). 정부의 질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서 출발한 정부 역량은 구체적으로 정부의 존재 목적인 국민의 행복과 사회의 균형 발전, 국가의 번영을 위한 제반의 보유 능력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기관신뢰와 정부역량은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에 대한 개인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즉 기관신뢰와 정부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정부의 정책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이고, 정책 과정에 대한 인식 역시 기대수준이 낮은 개인과 비교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연구들 또한 정부를 신뢰하는 국민일수록 세금납부에 성실히 반응하며, 국가가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교적 덜 비관적으로 인식한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이현우(2013)의 연구는 적어도 복지

영역에 한정해볼 때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식하는 것이 복지예산의 확대를 동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동의 여부에도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수준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즉, 정부 역량을 높게 인식하고 정부를 신뢰하는 개인일수록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에 순응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가설 2-1 정부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가설 2-2 기관신뢰가 높을수록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3)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

사회이동은 지위의 상하에의 이동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이동을 평가하는 지위의 기준은 소득, 직업, 교육 등이 대표적이다(Sorokin, 1959; 조창희, 1984; 홍두승·구해근, 2001). 오늘 날 빈부격차의 심화와 소득의 불평등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투자하는 자원의 양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사회 이동의 개방성을 저해할 수 있는데, 세대 간 상향이동과 하향이동 모두 노르딕 모델과 같은 평등한 사회에서는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Esping-Andersen, 2009). 사회이동은 동일 수준에 있는 사회적 위치 사이를 이동하는 수평적 이동과 서로 다른 사회계층 간 이동을 의미하는 수직적 이동으로 구분되며, 이 중 수직적 이동은 상승 또는 하강의 두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계층상승의 가능성, 즉 사회이동에 관한 인식이 사회신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설명하는데(이재완, 2013), 본 연구에서는 사회이동을 수직적 이동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이동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지원을 통해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이 존재한다. 사회이동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 역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재완(2013)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회신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사회 이동이 개방되어 있다고 인식할수록 사회신뢰가 높게 나타남을 규명하였다. 특히 개인의 재능과 노력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것이라는 희망은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촉진하며(조창희, 1984), 이는 점진적으로 다른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면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3). 선행연구들은 계층상승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 사회경제적 지위상승 메커니즘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사회의 경제구조나 제도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도 설명하지만, 사회 신뢰 및 법제도에 대한 믿음과 구체적으로 복지 영역에서 나타나는 사회이동성 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미비한 실정이다.

사회 복지 서비스의 구체적인 대상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므로, 만약 개인의 노력과 재능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

들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능과 노력을 통해 높은 지위에 달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재능이 없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인식할 수 있으며, 스스로를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아닌 비용부담 대상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증세 태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가설 3 사회이동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분석자료 및 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에서 실시된 '정부의 질과 정부신뢰 통계조사'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설문조사는 2018년 10월 19일부터 2018년 11월 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국민들이 인식하는 정부의 질, 복지 및 규제태도, 정부신뢰, 정부역량, 삶의 질 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한 자료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일반국민)이며 성별, 연령, 지역 주민등록 인구수에 맞추어 비례할당방식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고 설문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자 중 결측치를 제외한 846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 분석모형

연구에 활용된 종속변수는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 여부로, 증세에 동의할 경우를 1, 동의하지 않을 경우 0의 이분결과를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이다. 이러한 범주형 변인은 오차의 분포 역시 이산형이 되어 정규분포를 전제로 하기 한계가 있으며 오차항의 조건부 분산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등분산 가정을 위배한다. 따라서 선형 회귀분석을 적용할 경우 설명변인의 효과 크기가 과도하게 낮게 추정될 수도 있다(Pechazur, 1973). 이처럼 이분반응에 관심이 있는 경우 선형회귀분석은 적절한 통계분석법이라 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범주형 종속변인과 설명변인 간의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적용하게 된다(홍세희, 2005).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형태는 선형이 아닌 비선형의 특수한 형태로써 종속변수의 값이 '0' 또는 '1'을 가지는 로지스틱 곡선(logistic curve)의 형태를 취하는 단순한

비선형 회귀분석(nonlinear regression)에 해당한다(임영진,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 및 개인의 사회 이동성에 관한 인식이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통계 패키지로는 STATA 13.0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2. 변수의 측정

1) 분석자료

종속 변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현재보다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의 문항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증세 동의 여부이므로 응답자가 증세에 동의할 경우에는 1,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0으로 측정하여 가변수화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연령대는 일반국민이 응답한 본인의 나이를 범주화하여 설정한 변수이다. 범주는 크게 청년층과 노년층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연령대 범위는 청년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15세부터 34세까지를 청년층으로 설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해 활용한 자료가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15세부터 19세를 제외한 20세 부터 34세를 청년층으로 측정하였다. 노년층은 「국민연금법」 제61조 2항을 근거로 하여 응답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노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코딩하였다.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는 기관신뢰와 정부역량 두 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두 문항 모두 5점 척도로 구성된 변수를 사용하였다. 기관신뢰(a=0.9089)는 '귀하께서는 다음 기관들의 신뢰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5점 척도 문항에 대해 1) 중앙정부부처, 2) 국회, 3) 법원, 4) 청와대, 5) 경찰, 6)검찰, 7) 지방자치단체, 8) 공기업, 9) 군대, 10) 노동조합단체, 11) 시민단체, 12) 언론기관, 13) 정당, 14) 교육기관, 15) 의료기관, 16) 대기업, 17) 종교기관, 18) 금융기관에 대한 응답자

의 신뢰 수준을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정부역량(a=0.8827)에 관한 변수는 정부의 업무성과를 평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 업무 성과와 관련한 다음의 진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한 3개의 세부문항인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사용한다.', '정부는 예산을 지출한 이상의 업무성과를 낸다.', '정부는 의도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한다.'의 5점 척도 응답에 대한 평균값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이동성은 개인의 계층사다리 인식, 즉 본인의 노력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변동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측정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본인의 사회경제적 위치 변동을 묻는 '우리 사회에서 내가 노력하면,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과 자녀의 사회경제적 위치 변동 가능성을 물은 '우리 사회에서 내가 노력하면, 내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의 두 가지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사회경제적 배경 및 인구사회학적 요소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재정상태에 대한 인식 등을 설정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적 배경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는 정치이념, 성별, 수도권 거주 여부, 혼인 여부,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해당한다. 정치이념 변수는 '귀하의 이념적 성향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해당 문항에 대해 정치 성향이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경우 1로, 그 외 중도 및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경우 0으로 더미 변수 처리하였다. 성별은 남자일 경우 '1'로, 여자로 응답하였을 경우 '0'으로 설정하였다. 거주 지역에 관해서는 주민등록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응답자가 어느 광역시도에 거주하는지에 대해 범주형 가변수화하였으며, 분석의 기준이 되는 거주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이다. 혼인 여부 역시 기혼은 '1'로, 미혼의 경우 '0'으로 측정하였고, 교육수준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무학-초등학교 졸업 이하-중학교 졸업 이하-고등학교 졸업 이하-2년제 대학교 졸업 이하-4년제 대학교 졸업 이하-대학원 졸업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1부터 7까지의 값을 갖는 7첨 척도의 변수를 설정하였다. 소득수준은 한 달 평균 가구소득에 관한 문항을 활용하여 '50만원 미만-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3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4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500만원에서 600만원 미만-600만원 이상'이 차례대로 1부터 8까지의 값으로 측정된 변수를 활용하였다.

이상의 변수 외에 종속변수인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 동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일반적인 신뢰관계 인식과 주관적인 재정상태 인식, 공공부문 종사자 여부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일반적인 신뢰관계에 대한 인식의 경우 기관 신뢰와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자와 비용 부담자 모두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 재정을 활용하고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신뢰 변수는 '귀하는 다른

사람과의 신뢰관계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표현에 더 동의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1, 그 외의 경우 0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개인이 인식하는 본인의 재정상태 역시 사회복지 확대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객관적인 지표 외에 주관적인 인식 역시 본인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인지, 비용의 부담자인지를 판단하는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재정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재정상태에 한정하여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한 문항에 대해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한 10점 척도의 값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의 동의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공공부문 종사 여부를 설정하였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개인일수록 정부의 국정 방향과 기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요인이 종속변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종사 여부에 관해서는 정부 기관이나 정부가 대주주인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개인의 경우 1, 그 외의 경우 0으로 측정하였다.

변수 측정에 관한 내용은 〈표 1〉에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독립변수로 활용된 설문문항의 구조가 세부문항으로 구성되었으므로 각 독립변수에 해당되는 세부문항간의 신뢰도를 분석하여 변수화 가능성을 측정하고 그 신뢰도 또한 〈표 1〉에 함께 제시하였다.

〈표 1〉 변수 측정표

변수명		변수측정
[종속변수]		
사회복지확대의향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세금부담 의향 =1
[독립변수]		
연령층	청년층	청년(15세~34세)의 경우 1, 그 외 0으로 측정
	노년층	노년층(60세 이상)의 경우 1, 그 외 0으로 측정
정부역할 기대	정부역량 (α=0.8827)	정부 업무 성과와 관련한 다음의 3가지 진술에 대한 평균값을 활용 1)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사용한다 2) 정부는 예산을 지출한 이상의 업무성과를 낸다 3) 정부는 의도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한다
	기관신뢰 (α=0.9089)	다음 기관들의 신뢰수준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을 활용 (중앙정부부처, 국회, 법원, 청와대, 경찰, 검찰,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군대, 노동조합단체, 시민단체, 언론기관, 정당, 교육기관, 의료기관, 대기업, 종교기관, 금융기관)
사회이동성 (α=0.8727)		본인의 사회경제적 계층이동 가능성과 자녀의 사회경제적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평균값으로 측정
[통제변수]		
성별		성별에 관한 가변수를 활용 (1= 남자, 0=여자)
일반신뢰		타인과의 신뢰 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타인 신뢰할 수 있다=1, 그 외=0)
혼인여부		기혼=1, 미혼=0으로 측정
교육수준		최종학력에 대한 7점 척도를 활용 (무학=1, 초졸 이하=2, 중졸 이하=3, 고졸 이하=4, 2년제 대졸이하=5, 4년제 대졸이하=6, 대학원 졸업이상=7)

주관적 재정인식	스스로의 재정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문항을 활용 (0= 가장 불행한 상태, 10=가장 행복한 상태의 10점 척도)
소득수준	소득수준에 대한 8점 척도 응답을 활용 (50만원 미만=1, 50만원-100만원 미만=2, 100만원-200만원 미만=3, 200만원-300만원 미만=4, 300만원-400만원 미만=5, 400만원-500만원 미만=6, 500만원-600만원 미만=7, 600만원 이상=8)
진보성향	정치이념이 진보성향인 경우 1, 그 외 중도와 보수성향은 0으로 측정
공공부문 종사자	공공부문(정부 기관이나 정부가 대주주인 공기업을 포함)에 종사하는 경우 1, 그 외는 0으로 측정
거주지역	광역시도 기준 거주지역 더미 변수를 활용(기준범주: 세종특별자치시)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종속변수인 사회복지확대의향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중 약 34.63%가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신뢰는 평균값이 약 2.507로 나타났고, 정부역량의 경우 2.431점으로 상대적으로 응답자의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수준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응답자 중 청년층은 전체의 약 21.9%를 차지하는 반면, 노년층의 비중은 25.5% 수준이다.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평균값이 2.905점이며, 표준 편차는 0.867이다. 그 밖에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분석 대상자 중 남성은 약 51.41%로 과반을 약소하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약 48.58%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대상자 중 혼인한 상태인 응답자는 약 71.2%이며, 교육수준은 평균 5.55로 나타났다.[2] 그 외 정치이념에 관한 통계량을 살펴보면, 진보성향의 대상자는 약 30.85%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의 평균은 약 5.578로 나타났다.[3] 본인에 주관적인 재정상태에 대한 인식은 평균 약 4.82점으로 본인의 재정상태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종사자의 경우 분석 대상자 중 약 8.98%의 비율을 보여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 외 분석 대상자의 거주지역을 포함한 전체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2〉와 같다.

〈표 2〉 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명	관측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회복지확대의향	846	0.346	0.476	0	1
청년층	846	0.219	0.414	0	1
노년층	846	0.255	0.436	0	1

2) 교육수준 측정에서 5의 경우 2년제 대졸이하로 응답한 경우로, 평균이 5.55의 경우 응답자들이 평균적으로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 수준인 것을 의미한다.

3) 소득수준 측정에서 분석 대상자들의 평균적인 소득 구간은 300만원-400만원 미만에 해당한다.

기관신뢰	846	2.507	0.580	1	4.722
정부역량	846	2.431	0.882	1	5
사회이동성	846	2.905	0.867	1	5
성별(1=남성)	846	0.514	0.500	0	1
일반신뢰	846	0.220	0.414	0	1
혼인여부	846	0.713	0.453	0	1
교육수준	846	5.554	0.995	1	7
주관적 재정인식	846	4.820	2.354	0	10
소득수준	846	5.578	1.763	1	8
진보성향	846	0.309	0.462	0	1
공공부문 종사자	846	0.090	0.286	0	1
서울 거주	846	0.196	0.397	0	1
부산 거주	846	0.066	0.249	0	1
대구 거주	846	0.052	0.222	0	1
인천 거주	846	0.059	0.236	0	1
광주 거주	846	0.025	0.156	0	1
대전 거주	846	0.028	0.166	0	1
울산 거주	846	0.018	0.132	0	1
경기 거주	846	0.252	0.434	0	1
강원 거주	846	0.031	0.173	0	1
충북 거주	846	0.031	0.173	0	1
충남 거주	846	0.039	0.194	0	1
전북 거주	846	0.035	0.185	0	1
전남 거주	846	0.038	0.191	0	1
경북 거주	846	0.047	0.212	0	1
경남 거주	846	0.060	0.238	0	1
제주 거주	846	0.011	0.103	0	1

2. 상관관계 분석

〈표 3〉은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독립변수 중 기관신뢰와 정부역량 간의 상관관계가 0.4079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통제변수와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혼인여부와 청년층, 노년층 여부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청년층: -0.5553, 노년층: -0.3098). 독립변수인 기관신뢰와 정부역량의 경우 정부 및 공공 부문의 활동에 대한 설문 문항으로 그 상관관계가 다소 높게 나타날 여지는 있으나, 개념상의 구분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혼인의 여부와 청년층, 노년층 간의 높은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연령이 혼인의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령을 변수로 하여 추가 분석한 결과의 유의미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3〉 상관관계 분석표

	1	2	3	4	5	6	7
1. 사회복지확대의향	1						
2. 청년층	-0.0064	1					
3. 노년층	-0.0445	-0.3098***	1				
4. 기관신뢰	0.1165***	-0.0324	0.0686**	1			
5. 정부역량	0.2509***	0.0527	-0.0864**	0.4079***	1		
6. 사회이동성	0.0298	-0.0393	0.0502	0.3374***	0.2266***	1	
7. 성별(1=남성)	0.1061***	0.0393	-0.0492	-0.1013***	-0.0291	0.0570*	1
8. 일반신뢰	0.0455	-0.0806**	0.1408***	0.2052***	0.0156	0.1325***	0.0078
9. 혼인여부	-0.0485	-0.5553***	0.2998***	0.0167	-0.0630*	0.0826**	-0.0787**
10. 교육수준	0.0614*	0.0933***	-0.1737***	-0.045	0.0106	0.1312***	0.1043***
11. 주관적 재정인식	0.0493	-0.0872**	0.0712**	0.1975***	0.1261***	0.3586***	-0.0099
12. 소득수준	0.0615*	-0.0713**	-0.1721***	-0.0184	-0.0435	0.1158***	0.0102
13. 진보성향	0.2614***	0.0367	-0.0683**	0.0496	0.2734***	0.0778**	0.045
14. 공공부문 종사자	0.032	0.0738**	-0.0986***	0.0167	0.0246	0.0966***	0.0159
	8	9	10	11	12	13	14
8. 일반신뢰	1						
9. 혼인여부	0.1036***	1					
10. 교육수준	-0.0204	0.0071	1				
11. 주관적 재정인식	0.1449***	0.1803***	0.1547***	1			
12. 소득수준	0.0154	0.2112***	0.3115***	0.3294***	1		
13. 진보성향	0.0656*	-0.0058	0.0574*	0.0488	0.0278	1	
14. 공공부문 종사자	-0.0570*	-0.0198	0.1408***	0.0978***	0.0518	0.0408	1

주) 거주지역별 상관관계는 편의상 생략함

3. 실증분석 결과

〈표 4〉는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 태도의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한 표이다. 모형(1)은 통제모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통제변수만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고 모형(2)는 독립모형으로서 본 연구에서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독립변인만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한 모형이다. 모형(3)은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모두를 포함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모형으로, 각 모형의 Log pseudolikelihood값을 살펴보면 모형(3)의 값이 -483.7521로 나타나 모형(1)과 모형(2)에 비교하여 그 적합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연령대 구분에 따른 청년층과 노년층의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의향에 대한 증세 태도를 먼저 살펴보면, 청년층의 경우 증세에 동의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노년층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1-1은 지지되었으며, 가설 1-2는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이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에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년층과 대비하여 노년층의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

대할 경우 서비스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은 높지만,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에 지불되는 비용에 있어서는 부담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가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의 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에 대한 높은 신뢰 수준 역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역량이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동의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2-1과 기관에 대한 높은 신뢰수준이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동의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2-2는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이동성과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사회이동이 개방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개인일수록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한 독립변수의 승산비(odds ratio)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층인 경우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를 0.66배(exp(-0.414)=0.66) 만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는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경우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를 30% 이상 증가(exp(0.274)=1.315)시키며, 더불어 정부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동의 가능성은 약 70% 가까이 증가(exp(0.524)=1.688)한다. 반면, 사회이동성, 즉, 본인의 노력에 따라 계층 간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개인일수록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는 동의할 가능성은 약 20% 가까이 감소(exp(-0.204)=0.815)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통제변인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복지관, 진보성향, 여성의 경우,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에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기혼일수록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에는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사회복지확대의향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Coefficient(SE)	Odds ratio	Coefficient(SE)	Odds ratio	Coefficient(SE)	Odds ratio
청년층			−0.162 (0.190)	0.850504	−0.414* (0.235)	0.6610064
노년층			−0.179 (0.185)	0.83628	0.0506 (0.203)	1.051879
기관신뢰			0.130 (0.148)	1.138667	0.274* (0.161)	1.315637
정부역량			0.615***	1.850212	0.524***	1.688114

			(0.0971)		(0.105)	
사회이동성			−0.0927 (0.0939)	0.911432	−0.204* (0.105)	0.815091
성별	0.397*** (0.154)	1.487501			0.486*** (0.160)	1.625568
일반신뢰	0.178 (0.186)	1.195155			0.166 (0.197)	1.180972
혼인여부	−0.336* (0.174)	0.714969			−0.487** (0.222)	0.614256
교육수준	0.0511 (0.0842)	1.052402			0.0884 (0.0874)	1.092461
주관적재정인식	0.0222 (0.0358)	1.022456			0.00384 (0.0393)	1.003852
소득수준	0.0708 (0.0493)	1.07336			0.111** (0.0527)	1.117917
진보성향	1.136*** (0.160)	3.115629			0.956*** (0.169)	2.602249
공공부문종사자	0.0631 (0.275)	1.065121			0.117 (0.283)	1.12402
서울	−1.468** (0.733)	0.230317			−1.430* (0.738)	0.23924
부산	−1.455* (0.772)	0.233439			−1.394* (0.782)	0.248174
대구	−1.482* (0.789)	0.227114			−1.269 (0.799)	0.281202
인천	−1.317* (0.776)	0.267827			−1.285 (0.784)	0.276647
광주	−1.192 (0.852)	0.303566			−1.398 (0.858)	0.247036
대전	−2.137** (0.881)	0.118013			−2.264** (0.895)	0.103917
울산	−1.292 (0.911)	0.274624			−1.626* (0.930)	0.196804
경기	−1.342* (0.727)	0.261345			−1.357* (0.733)	0.257435
강원	−1.186 (0.828)	0.305396			−1.058 (0.834)	0.347103
충북	−0.999 (0.824)	0.368282			−0.858 (0.836)	0.423882
충남	−1.137 (0.803)	0.320898			−1.049 (0.810)	0.350212
전북	−1.072	0.342405			−1.129	0.32342

	(0.811)				(0.816)	
전남	−1.321 (0.812)	0.266829			−1.244 (0.821)	0.288347
경북	−1.429* (0.799)	0.239653			−1.317 (0.808)	0.267887
경남	−1.257 (0.778)	0.284574			−1.220 (0.786)	0.295103
제주	−1.732* (1.031)	0.177004			−1.768* (1.066)	0.170752
Intercept	−0.487 (0.868)		−2.154*** (0.394)		−2.073** (0.986)	
Pseudo R2	0.0746		0.0523		0.1137	
Log pseudolikelihood	−505.0893		−517.233		−483.7521	
Observations	846		846		846	

주)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대,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수준,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이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 동의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이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복지 영역의 확대를 위한 증세는 공적 숙의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민주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 인식하는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수준과 사회이동의 개방정도가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에 사회복지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논의가 미비하였던 사회이동의 개방성 인식의 영향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대의 구분에 따른 영향은 청년층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반면에 노년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는 기관신뢰와 정부역량에 대한 인식 모두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 동의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회이동이 개방적이라고 인식할수록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에는 동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합하면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수준인 높을수록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나, 개인의 역량과 재능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이 가능하다고 믿는 개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에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에 있어서는 개인의 정부 역할에 대한 결과적·과정적 측면에 있어 긍정적인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정책의 성과와 정책의 운영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와 지지의 수반이 필수적이며, 특정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정책이 갖는 특성 및 목표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정책을 집행 및 운영하는 정부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한다. 오늘날 정부는 정부혁신을 통해 정부 역량의 제고 및 정부신뢰 향상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정부 역량에 대한 의심은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므로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들과의 소통 및 상호적 관계 형성을 통해 정부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동을 개방적으로 인식할수록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 반응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노력과 재능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이 가능하다고 믿는 개인들이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용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사회서비스가 노력과 재능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수혜를 주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이들이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확대를 위한 조세부담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이동이 폐쇄적인 사회와 개인이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해 폐쇄적으로 인식하는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 복지국가와 사회이동 간의 선후관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노르딕 모델의 복지국가는 사회이동이 개방적인 동시에 복지국가로서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한국을 사회이동이 개방적인 평등한 사회라고 인식하는 동시에 사회복지 영역의 확대를 통한 복지국가 모델로의 이행에 있어서도 지지하게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문화적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논의한 정부의 역량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성숙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조건이 개인의 역량과 재능에 기반한 능력주의가 전제된 상황이 아닌 개인의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한 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지닌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연구의 한계 또한 존재한다. 우선, 방법론적으로 첫째, 단일시점의 횡단면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에 따른 경향 변화의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며, 이에 따라 역인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독립변수 중 하나인 연령대가 선행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료의 보완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정규. (2014). 지역사회 환경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구인회·손병돈·안상훈. (2010).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나남.

김민주. (2017). 사회자본이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과학연구」, 36(1): 135-161.

김민주·지은구. (2015). 지역주민의 사회자본이 사회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일반주민과 사회복지사 집단간 비교. 2015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진욱. (2005). 한국 복지국가 공급체계의 혼합 구성.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pp. 35-56.

이승주·박소영 (2019).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증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3(2), 153-173

이재완. (2013). 계층이동 사다리가 사회신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3): 189-223.

이지호·황아란. (2016). 복지태도의 결정요인 분석-복지수준과 '정부의 질'에 대한 인식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3(1): 257-285.

이현우. (2013). 복지예산 규모에 대한 태도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국제정치논총」, 53(2): 249-280.

임영진. (2011). 가구특성에 따른 주거입지요인 및 주택선호유형.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정하·김성한. (2018).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신뢰, 수용, 소통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5(1): 86-110.

조창희. (1984). 사회이동의 사회심리적 영향: 청소년 비행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논문집」, 17(1): 321-337.

주은선·백정미. (2007).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 회복지연구」, 34(3): 203-225.

최영준·배주현. (2016). 미래 사회보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중장기 사회보장 계획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검토. 「사회보장연구」, 32(2): 271-299.

최진욱·윤견수·김헌. (2011). 정부의 질 개념구성에 관한 탐색.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홍세희. (2005).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Alcock, Pete. (1996). *Social Policy in Britain*. London: Macmillan Press Ltd.

Esping-Andersen, G. (2009).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welfare states to women's new roles*. Polity.

Kahn, H. (2019). *World economic development: 1979 and beyond*. Routledge.

Pedhazur, E. J., & Kerlinger, F. N. (1973). *Multiple regression in behavioral research*.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Sorokin, P. A. (1959). *Social and cultural mobility. New York*, *4*, 99-145.

Svallfors, S. (2002). *Political Trust and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unpacking a supposed*

relationship. Restructuring the Welfare state, political institutions and policy change. New York, Palgrave, 184-203.

Van de Walle, S., and Bouckaert, G. (2003). Public service performance and trust in government: the problem of caus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6(8-9): 891-913.

Welch, E. W., Hinnant, C. C., &Moon, M. J. (2004). Linking citizen satisfaction with e-government and trust in government.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5*(3): 371-391.

주혜린(朱惠隣):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로는 제도주의 조직론, 사회적 기업, 규제정책 등이며 주요 논문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영향요인: 일반 국민의 인식을 중심으로"(2019), "지방정부 단체장 매니페스토의 내용분석: 민선 6-7기 광역자치단체장 선언을 중심으로"(2019) 등이 있다(oddmelody@naver.com).

황정윤(黃貞允):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로는 사회적 기업, 사회혁신, 성과관리, 조직론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영향요인: 일반 국민의 인식을 중심으로"(2019), "이해관계자 접근을 중심으로 한 공기업 조직효과성 평가: 이명박 정부 시기를 중심으로"(2019) 등이 있다(xidxiddl@gmail.com).

〈논문접수일: 2020. 1. 10 / 심사개시일: 2020. 1. 15 / 심사완료일: 2020. 2. 4〉

Abstract

The Personal Attitudes Toward Tax Raise: Age, Social Mobility, and Government Expectation

Joo, Hyelin
Hwang, Joungyoon

We attempt to identify the impact of age, social mobility and the expectation of government roles on individuals' tax attitudes to expand social welfare services. Using data of '2018 Government Quality and Government Confidence Statistics Survey' by the Institute for Future Government of Yonsei University, we conducted a logistic regression. We measured the dependent variable as whether to agree to tax increases for the expansion of social welfare services as social welfare, and independent variables as age groups, expectations for government roles, and recognition of social mobility. Findings show the public positively agree on the expansion of social welfare services: 1) with younger age groups, 2) when they have higher the expectation of the government's role, 3) and when they recognize low social mobility.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seek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achieving social consensus on tax increases to secure funds and form a foundation for the movement of the open classes.

Key Words: Social welfare services, government trust, social mobility, social welfare expansion, age group